

재정패널 소식지

2022년 제2호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한 국 조 세 재 정 연 구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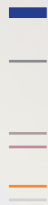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재정패널 소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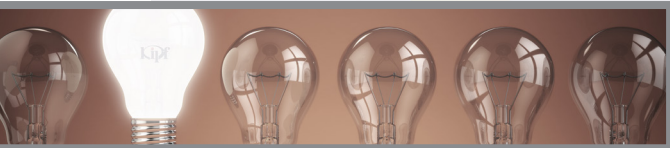
2022년 제2호

한 국 조 세 재 정 연 구 원

www.kipf.re.kr/panel/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재정패널 소식지

2022년 제2호

재정패널 조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단위의 조사로 우리나라 가계의 재정·조세·복지 현황 등을 파악하고, 관련 정부 정책의 효과 검증을 위해 설계된 패널조사입니다.

Contents

재정패널 소개	04
원표본 조사 성공률	05
자료 이용안내	06
14차년도 부가조사 안내	07
2022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	18
2022년 재정패널 활용 연구	37

재정패널 소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 조세·재정·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함으로써 국가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 재정패널 조사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단위의 종단조사
- 조세 및 재정 정책의 효과 검증, 가계 조세부담 및 복지수혜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설계
- 2022년 현재 15차년도 현장 조사 완료

■ 조사 대상

- 전국 15개 시·도에서 추출된 5,634가구 및 2021년 신규 추출한 4,035가구

■ 조사 영역

- 납세 및 복지, 지출 및 소득, 자산 및 부채, 경제활동 상태, 소득공제내역, 사회 인식

■ 조사 특징

- 1) 납세자의 소득신고서류 수집을 통한 자료 생성
 -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소득신고서류 수집
 - 항목별 소득공제액 또는 세액공제액, 결정세액 정보 제공
- 2) 안정적으로 패널을 유지하며 매년 높은 조사 성공률 보유
- 3) 개인의 사회 및 납세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수행

원표본 조사 성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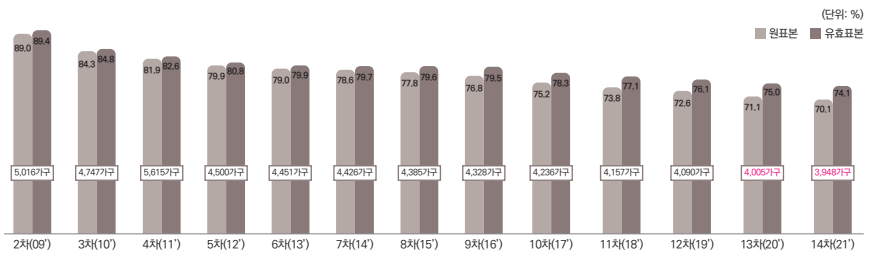
재정패널
소식지

14차년도 기준 원표본 조사 성공률

▶ 원표본(1차 원표본 및 2차 대체표본) 기준 성공률: 70.1%

▶ 유효 원표본* 기준 성공률: 74.1%

* 기준 원표본 가구 중 조사가 불가능한 가구(사망, 해외이민 등)를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으로 산출한 조사 성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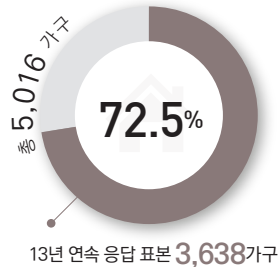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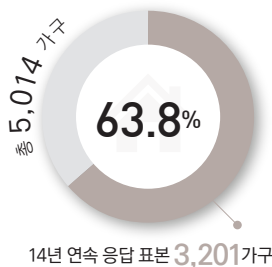


연속 조사 성공률

▶ 14차년도 기준 14년 연속 응답 표본가구에 종단가중치가 부여되어 있음(13차년도는 13년 연속 응답 표본가구)

▶ 1차 원표본(5,014가구) 기준 14년 연속 응답 표본: 3,201가구

※ 2차 대체표본까지 포함한 5,016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13년 연속 응답 표본가구는 총 3,638가구
이나, 이들 가구는 종단가중치 부여대상에서는 제외됨



자료 이용안내

재정패널 공식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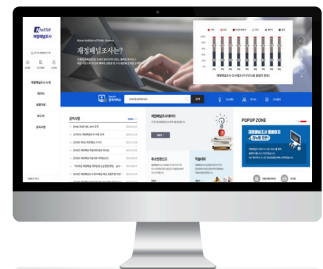
- ▶ 제공 범위: 1~13차 데이터, 기초분석보고서, 테크니컬 리포트
- ▶ 제공 방식: 공식 홈페이지 및 KOSIS를 통한 주요 결과 공개
- ▶ 2022년 12월 23일, 14차 재정패널 데이터 공개 예정

자료 다운로드

- ▶ 공식 홈페이지 데이터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 www.kipf.re.kr/panel/
- ▶ 간단한 연구 관련 정보 입력 후 자료 및 보고서 다운로드 가능

SMART NaSTaB

- ▶ 데이터 가공용 STATA 프로그램
 - 재정패널자료의 가공 시간을 단축하고, 오류 없는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구축함
- ▶ 프로그램에서 활용 가능한 가공
 - 연도별, 가구별, 가구원별 데이터 병합
 - 소득 및 지출 등 생성 변수 추출
- ▶ SMART NaSTaB 다운로드
 - 재정패널 홈페이지 ▶ 공지사항 ▶ SMART NaSTaB_ver2(다운로드)
- ▶ 특이사항
 - STATA 13.0 버전 이상에서 구동 가능
 - 대화창 및 명령구문을 통해 활용 가능



14차년도 부가조사 안내

재정패널
소식지

재정패널 조사의 부가조사 영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한시적 조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14차년도의 경우 기본소득제도 도입과 2020년 코로나19 거리두기 및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책 평가 조사를 진행하였다. 14차년도 부가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기본소득제도

기본소득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일생 동안 조건 없이 일정액의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재정패널 조사에서는 기본소득으로 매월 기초생계급여와 동일한 금액(2021년 기준 54만 8,349원)을 지급하는 경우와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부가조사를 진행하였다.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 가정은 <표 1>의 내용과 같으며, 1) 매월 기초생계급여와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경우와 2) 매월 100만원씩 지급받는 경우로 나누어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표 1> 기본소득 부가조사를 위한 가정

- 기초생계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의 현금지원이 폐지된다고 가정
- 기초생계급여 외 의료급여와 주거급여·교육급여가 유지되며, 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제도도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 기존의 소득과 함께 기본소득에 소득세 부과되는 것으로 가정(즉 증가된 소득만큼 현재의 세부담에 비례하여 세금이 증가)
-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세율이 인상될 것으로 가정(단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인상률이 적용)

1) 매월 기초생계급여와 동일한 금액의 기본소득 도입

매월 기초생계급여와 동일한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받는다고 가정할 때, 본인의 가처분 소득의 변화는 '약간 증가한다'가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동일한 금액의 기초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므로 가처분 소득에 변화가 없음'이라는 응답은 15.2%로 나타났다.

14차년도 부가조사 안내

〈표 2〉 기초생계급여와 동일한 금액 기본소득제도 도입 시, 가처분 소득 변화

(base: 가구원 의식조사 응답자 1만 4,285명)

구분	항목	비중(%)
기초생계급여와 동일한 금액 기본소득제도 도입 시, 가처분 소득 변화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동일한 금액의 기초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므로 가처분 소득에 변화가 없음	15.2
	기존과 세금이 비슷하거나 약간만 늘어나 가처분 소득 증가	26.0
	기본소득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므로 가처분 소득 약간 증가	27.7
	기본소득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므로 기존 가처분 소득과 크게 달라지지 않음	25.8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가처분 소득 감소	5.3

기초생계급여와 동일한 금액의 기본소득제도가 도입되면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취업을 하지 않을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 기초생계급여와 동일한 금액 기본소득제도 도입 시, 근로 중단 의향

(base: 가구원 의식조사 응답자 1만 4,285명)

구분	항목	비중(%)
기초생계급여와 동일한 금액의 기본소득제도 도입 시, 일을 그만두거나 취업하지 않을 의향	매우 그렇다(a)	1.6
	그렇다(b)	14.8
	보통이다/잘 모르겠다(c)	26.1
	그렇지 않다(d)	41.8
	매우 그렇지 않다(e)	15.6

(1) 하던 일을 그만 두거나 취업하지 않을 경우, 여유시간 활용 방법(〈표 3〉 a+b 응답자만)

기초생계급여와 동일한 금액의 기본소득제도 도입 시,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취업을 하지 않을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근로 중단 후의 여유시간 활용 방법에 대해 조사하였다. 휴식을 취할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6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 4〉 근로 중단 후 여유시간 활용 방법

(base: 근로 중단 의향 '매우 그렇다'+ '그렇다' 응답자 2,450명)

구분	항목	비중(%)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취업하지 않을 경우, 여유시간 활용 방법 (1순위 기준)	휴식(건강 유지를 위한 운동 포함)	61.5
	취미 활동	25.2
	자녀 등 부양가족 돌봄	6.5
	적성에 맞거나 시간 소요가 적은 다른 일	5.2
	적성에 맞는 일 또는 많은 수입을 위한 교육·훈련	1.6

(2) 현재 일하는 시간보다 적게 일할 의향〈표 3〉 c+d 응답자만)

기초생계급여와 동일한 금액의 기본소득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하던 일을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의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기본소득을 받더라도 현재의 근로시간을 유지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77.9%('그렇지 않다' 59.7% + '매우 그렇지 않다' 18.2%)였다.

〈표 5〉 현재 근로 유지 시, 근로시간 단축 의향

(base: 근로 중단 의향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응답자 8,039명)

구분	항목	비중(%)
현재 근로 유지 시, 근로시간 단축 의향	매우 그렇다	0.5
	그렇다	10.8
	보통이다/잘 모르겠다	10.9
	그렇지 않다	59.7
	매우 그렇지 않다	18.2

2) 월 100만원의 기본소득 도입

현재 본인의 소득 수준과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고려할 때, 월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기본소득의 상당 부분을 증가된 세금으로 내야 하므로 가처분 소득이 약간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31.6%로 나타났다.

14차년도 부가조사 안내

〈표 6〉 월 100만원 기본소득제도 도입 시, 가처분 소득 변화

(base: 가구원 의식조사 응답자 1만 4,285명)

구분	항목	비중(%)
월 100만원 기본소득제도 도입 시, 가처분 소득 변화	기본소득과 기초생계급여의 차이만큼 가처분 소득 증가	13.4
	기존과 세금이 비슷하거나 약간만 늘어나 가처분 소득 증가	28.1
	기본소득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므로 가처분 소득 약간 증가	31.6
	기본소득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므로 기존 가처분 소득과 크게 달라지지 않음	21.9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가처분 소득 감소	4.9

월 100만원의 기본소득제도가 도입된다면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취업을 하지 않을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7〉 월 100만원 기본소득제도 도입 시, 근로 중단 의향

(base: 가구원 의식조사 응답자 1만 4,285명)

구분	항목	비중(%)
월 100만원 기본소득제도 도입 시, 일을 그만두거나 취업하지 않을 의향	매우 그렇다(a)	2.6
	그렇다(b)	16.1
	보통이다/잘 모르겠다(c)	28.5
	그렇지 않다(d)	41.9
	매우 그렇지 않다(e)	11.0

(1)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취업하지 않을 경우, 여유시간 활용 방법(〈표 7〉 a+b 응답자만)

월 100만원의 기본소득제도 도입 시,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취업을 하지 않을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근로 중단 후의 여유시간 활용 방법에 대해 조사하였다. 휴식을 취할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6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 8〉 근로 중단 후 여유시간 활용 방법

(base: 근로 중단 의향 '매우 그렇다'+ '그렇다' 응답자 2,833명)

구분	항목	비중(%)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취업하지 않을 경우, 여유시간 활용 방법 (1순위 기준)	휴식(건강 유지를 위한 운동 포함)	64.3
	취미 활동	24.2
	자녀 등 부양가족 돌봄	5.2
	적성에 맞거나 시간 소요가 적은 다른 일	5.4
	적성에 맞는 일 또는 많은 수입을 위한 교육·훈련	0.9

(2) 현재 일하는 시간 보다 적게 일할 의향(〈표 7〉 c+d 응답자만)

월 100만원의 기본소득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하던 일을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의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기본소득을 받더라도 현재의 근로시간을 유지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75.1%('그렇지 않다' 61.9% + '매우 그렇지 않다' 13.2%)였다.

〈표 9〉 현재 근로 유지 시, 근로시간 단축 의향

(base: 근로 중단 의향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응답자 7,323명)

구분	항목	비중(%)
현재 근로 유지 시, 근로시간 단축 의향	매우 그렇다	0.6
	그렇다	13.1
	보통이다/잘 모르겠다	11.4
	그렇지 않다	61.9
	매우 그렇지 않다	13.2

14차년도 부가조사 안내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정책 평가

1) 거리두기 정책 평가

2020년 조사 당시 시행된 정부의 거리두기 관련 정책에 대해 세 가지 문항을 통해 평가하도록 설계하였다. 조사 결과, 정부의 코로나19 거리두기 정책이 적절하였다는 평가가 66.9%('매우 적절' 11.1% + '약간 적절' 55.8%)로 나타났고, 부적절하였다는 평가는 10.0%('약간 부적절' 9.0% + '매우 부적절' 1.0%)로 나타났다.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의 코로나19 예방 효과는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62.3%('매우 효과적' 9.9% + '약간 효과적' 52.4%), 비효과적이라는 응답이 11.3%('약간 비효과적' 10.0% + '매우 비효과적' 1.3%)로 나타났다.

〈표 11〉과 같이 거리두기 정책에 대한 평가와 코로나19 예방 효과에 대한 평가를 교차해서 살펴보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의 성향이 비교적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리두기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면, 코로나19 예방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그중 중립적인 응답인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가구원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거리두기 정책을 보통이라고 응답한 가구원 중 74.3%는 거리두기의 예방 효과도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는데, 나머지 35.7%의 가구원 중 16.2%의 가구원은 예방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매우 효과적' 0.5% + '약간 효과적' 15.7%)하였고, 9.5%는 부정적으로 평가('약간 비효과적' 8.8% + '매우 비효과적' 0.7%)한 것에 특징이 있다.

거리두기 정책이 지자체별로 유형 상황과 전파력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온 것에 대하여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가 52.1%,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가 43.6%의 비율로 나타났다.

〈표 10〉 정부의 코로나19 거리두기 관련 정책 평가

(base: 가구원 의식조사 응답자 1만 4,285명)

구분	항목	비중(%)
코로나19 거리두기 정책 평가	매우 적절	11.1
	약간 적절	55.8
	보통이다	23.2

〈표 10〉의 계속

구분	항목	비중(%)
코로나19 거리두기 정책 평가	약간 부적절	9.0
	매우 부적절	1.0
거리두기 정책의 코로나19 예방 효과	매우 효과적	9.9
	약간 효과적	52.4
	보통이다	26.4
	약간 비효과적	10.0
	매우 비효과적	1.3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43.6
거리두기 정책의 선별적 적용 평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52.1
	잘 모르겠다	43.0
	기타	0.0

〈표 11〉 정부의 코로나19 거리두기 관련 정책 평가(결합 분포)

(base: 가구원 인식조사 응답자 1만 4,285명)

구분	거리두기 정책의 코로나19 예방 효과						
	매우 효과적	약간 효과적	보통이다	약간 비효과적	매우 비효과적	전체	
코로나19 거리두기 정책 평가	매우 적절	64.2	32.8	2.5	0.5	0.0	100.0
	약간 적절	4.3	80.3	13.5	1.9	0.1	100.0
	보통이다	0.5	15.7	74.3	8.8	0.7	100.0
	약간 부적절	0.3	9.3	22.2	62.0	6.2	100.0
	매우 부적절	0.0	8.3	7.2	25.8	58.7	100.0
	전체	8.9	52.3	28.4	9.1	1.4	100.0

14차년도 부가조사 안내

2) 경제적 지원 정책 평가

2020년 시행된 정부의 경제적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보편적 지원인 긴급재난지원금과 선별적 지원인 소상공인지원금으로 영역을 나누어 조사하였다.

(1) 긴급재난지원금 평가

2020년 5월에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 거의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재난지원금이 필요했다고 응답한 의견이 63.5%('매우 필요' 15.3% + '약간 필요' 48.2%)로 나타났다.

〈표 12〉 긴급재난지원금 인지

(base: 가구원 의식조사 응답자 1만 4,285명)

예	아니오
97.5%	2.5%

〈표 13〉 긴급재난지원금 필요성

(base: 가구원 의식조사 응답자 1만 4,285명)

구분	항목	비중(%)
긴급재난지원금 필요성	매우 필요	15.3
	약간 필요	48.2
	보통이다	24.4
	약간 불필요	9.6
	매우 불필요	2.5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금액 수준은 '보통이다'가 60.8%로 가장 많았으며, 금액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22.9%('매우 많다' 2.7% + '약간 많다' 20.2%), 적다고 응답한 비율은 16.3%('약간 적다' 14.8% + '매우 적다' 1.5%)로 나타났다.

〈표 14〉 긴급재난지원금 금액 수준

(base: 가구원 의식조사 응답자 1만 4,285명)

구분	항목	비중(%)
긴급재난지원금 금액 수준	매우 많다	2.7
	약간 많다	20.2
	보통이다	60.8
	약간 적다	14.8
	매우 적다	1.5

(2) 소상공인지원금 평가

코로나19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선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 중 소상공인지원금에 대한 가구원들의 평가를 조사하였다. 먼저 2021년 3월부터 제4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지급한 소상공인지원금을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1%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소상공인지원금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75.6%('매우 필요' 22.0% + '약간 필요' 53.6%)로 나타났으며,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5.2%('약간 불필요' 4.4% + '매우 불필요' 0.8%)로 조사되었다.

〈표 15〉 소상공인지원금 인지

(base: 가구원 의식조사 응답자 1만 4,285명)

예	아니오
84.1%	15.9%

〈표 16〉 소상공인지원금 필요성

(base: 가구원 의식조사 응답자 1만 4,285명)

구분	항목	비중(%)
소상공인지원금 필요성	매우 필요	22.0
	약간 필요	53.6
	보통이다	19.2

14차년도 부가조사 안내

〈표 16〉의 계속

구분	항목	비중(%)
소상공인지원금 필요성	약간 불필요	4.4
	매우 불필요	0.8

소상공인지원금의 금액 수준에 대해 '보통이다'라는 평가가 53.3%로 가장 많았으며, 많다가 22.4%(‘매우 많다’ 3.1% + ‘약간 많다’ 19.3%), 적다가 24.2%(‘약간 적다’ 20.8% + ‘매우 적다’ 3.4%)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표 17〉 소상공인지원금 금액 수준

(base: 가구원 의식조사 응답자 1만 4,285명)

구분	항목	비중(%)
소상공인지원금 금액 수준	매우 많다	3.1
	약간 많다	19.3
	보통이다	53.3
	약간 적다	20.8
	매우 적다	3.4

소상공인지원금이 그들의 경영에 도움이 되었는지 평가한 문항에서는 ‘약간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4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포함한 긍정적인 평가가 55.8%로 나타났다(‘매우 도움된다’ 8.1% + ‘약간 도움된다’ 47.7%).

〈표 18〉 소상공인지원금 경영 도움 정도

(base: 가구원 의식조사 응답자 1만 4,285명)

구분	항목	비중(%)
소상공인지원금 경영 도움 정도	매우 도움된다	8.1
	약간 도움된다	47.7
	보통이다	30.8

〈표 18〉의 계속

구분	항목	비중(%)
소상공인지원금 경영 도움 정도	약간 도움되지 않는다	11.7
	매우 도움되지 않는다	1.7

경제적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의 마지막 문항으로 조사한 지원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피해와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36.3%,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대상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는 평가가 63.7%로 나타났다.

〈표 19〉 정부의 경제적 지원정책 방향

(base: 가구원 인식조사 응답자 1만 4,285명)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36.3%	63.7%

3) 코로나19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

방역과 경제 지원을 포함한 정부의 전반적인 코로나19 정책은 적절했는지 평가하는 질문에서는 적절했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58.4%('매우 적절' 9.2% + '약간 적절' 49.2%)로 나타났으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9.8%('약간 부적절' 8.8% + '매우 부적절' 1.0%)로 나타났다.

〈표 20〉 전반적인 코로나19 정책 평가

(base: 가구원 인식조사 응답자 1만 4,28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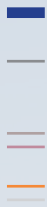
구분	항목	비중(%)
전반적인 코로나19 정책 평가	매우 적절	9.2
	약간 적절	49.2
	보통이다	31.9
	약간 부적절	8.8
	매우 부적절	1.0

*14차년도 재정패널 조사는 2022년 12월 23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상기 기초통계 값은 데이터 보완 및 정제과정을 통해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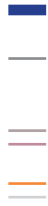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2022년 12월 공개 예정인 '14차년도 기초분석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kipf.re.kr/panel/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2022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

» 1-1

보유세 부담이 고령가구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김병남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 박사수로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고령가구에 대한 보유세 부담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공시가격과 종합부동산세 세율 등 전반적으로 세 부담이 높아져 온 탓에 상대적으로 취약 계층인 고령가구의 세 부담 증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들의 소비지출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관련된 국내 연구가 많지 않은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보유세 부담이 소비항목별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령가구의 보유세 부담에 따른 소비감소는 보고되지 않았다.

» 1-2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효과에 관한 연구

이경배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위원

본고는 50세 이상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의 증가가 연금계좌 납입액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재정패널 자료(제12~14차)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패널 확률효과 토빗모형으로 추정 결과,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액이 200만원 증가할 경우 납입액은 16.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ID 모형을 이용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50세 이상)의 평균 처리효과(ATE)를 추정한 결과, 연령과 소득이 추가 공제대상이면서 세액공제를 받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납입금액 평균이 약 23만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편의 문제를 완화한 PSM-DID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에서도 제도로 인해 실험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약 45만원 더 납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정책효과를 추정한 회귀분석 결과를 볼 때, 제도의 효과는 저소득층보다 주로 중소득층에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었다.

» 1-3

연금계좌 세액공제 적격 납입액 한도 인상이 은퇴 저축에 미치는 효과

김도형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고는 2020년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한 조치가 연금저축 납입액에 미친 영향을 재정패널 조사 제13차년도 및 제14차년도(베타 버전)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우리는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치가 50세 이상 납세자에 국한된 사실에 착안하여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2020년 연금계좌 세액공제 적격납입액 한도 인상이 연금저축 납입액을 증가시켰다는 분명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국세청의 무작위 추출된 대규모 미시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전병목·김도형, 2022)와 대조되는데, 그 차이는 재정패널의 표본 크기가 작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로 보인다. 이는 재정패널의 제한적인 표본 크기로 인해 표본의 일부에 의존하는 연구 설계에는 잘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II-1

소득탄력성 요인분해를 통해 살펴본 결정요인별 소득세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본 연구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소득탄력성을 추정하고, 동탄력성을 3개 결정요인에 대해 요인분해하여 소득세 누진성과 소득재분배 효과의 원천과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소득세의 소득탄력성은 소득세의 과표탄력성, 과표의 과세소득 탄력성, 과세소득의 (총)소득탄력성의 곱으로 요인분해할 수 있다. 소득세의 소득탄력성과 3개 결정요인 탄력성의 곱은 이론적으로는 서로 같다. 다만 탄력성 추정과정에서 회귀분석 오차로 인해, 절댓값이 크지는 않지만 두 가지 형태의 탄력성 추정치는 약간 차이가 난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소득탄력성은 1.68270과 2.06321로, 탄력성이 1을 크게 초과할 정도로 탄력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득탄력성의 요인분해 분석 결과에 의하면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소득세의 과표탄력성과 과표의 과세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다. 정량적으로 두 가지 세부요인의 탄력성은 근로소득세가 종합소득세보다 더 크다. 반대로 과세소득의 가구(총)소득탄력성은 근로소득세가 0.52325로 비탄력적인 반면, 종합소득세는 1.07574로 1보다 크다. 앞의 두 탄력성은 각각 소득세의 세율체계와 공제체계의 누진도, 즉 제도의 누진도를 나타낸다. 제도의 누진도는 근로소득세가 종합소득세보다 더 크지만 과세소득 분포 특성의 차이로 인해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소득탄력성 크기가 역전된다. 3개 요인의 탄력성 중 2개의 제도 관련 탄력성은 조세정책을 개편하면 탄력성 수준의 가감이 가능하다. 그러나 과세소득의 소득탄력성은 정책당국이 임의적으로 조절할 수 없다. 소득세의 누진도 또는 소득재분배 효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할 때 제도 개편을 통해 소득탄력성(누진도 또는 소득재분배 효과)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지만 과세소득의 소득분포(즉 과세소득의 소득탄력성)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정책효과와 방향과 크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II-2

재정패널을 이용한 기부탄력성 추정분석

김진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백혜연 창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우리나라 개인기부에 대한 조세지원방식이 2014년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변화되고 그 이후 세액공제율의 증가와 고세율공제율 적용 기부금 하한선의 하락으로 기부 활성화를 꾀하면서, 개인기부 관련 조세지원의 효과에 대한 이론 및 실증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특히 개인기부자가 기부 1원을 하는 데에 실제로 지불하는 기부가격이 기부금 총액에 미치는 영향도를 나타내는 '기부의 기부가격탄력성'에 대한 연구가 몇 차례 진행되었으나, 기부가격탄력성 추정치의 혼재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불일치가 상당하였다. 기부 관련 이론모형의 부재와 데이터의 부실로 종합적 분석의 진행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정패널을 통한 기부 관련 데이터의 축적에 따라 이론모형에 기초한 실증분석을 통해 기부가격탄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부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고는 재정패널 제1차(2008년 조사)에서 제14차(2021년 조사)까지의 데이터 중 연말정산 신고자를 중심으로 기부금의 기부가격탄력성을 Two-part 모형, Heckman two stage 모형, Random Effect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Random Effect Tobit 모형에서는 기부금의 기부가격탄력성이 -0.86 으로 유의미하게 추정되었다. 즉 기부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에도 불구하고 기부가 그다지 탄력 있게 반응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다른 두 모형에서 기부가격은 기부행위의 유무에 대한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의 급격한 제도 변화에 대해 기부금액이 감소하고 그 이후 세율조정에 의한 기부 활성화가 진행된 것이 아직까지는 그 효과가 반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소득분위별, 기부자 특성별 기부가격탄력성을 추정하여 맞춤형 정책과제를 찾고, 특히 고액기부자의 기부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II-3

Perception of income inequality and giving

김영록 간사이대학교 박사후 연구원

만홍우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후 연구원

This study analyzes how perceptions of income inequality relate to donation behavior by examining approximately 10,000 taxpayers across South Korea. We focus on individuals' perceptions of current and future income inequality and find the following: First, increasing the perception of income inequality promotes donation behavior. Second, individuals who believe current income inequality is more severe than it will be in the future will reduce the amount of giving compared with individuals who view present and future income inequality as the same. Third, the perception of income inequality of the high-income group shows a more significant and stable positive relationship with donations. Overall, our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oretical predictions that greater inequality increases charitable giving.

»III-1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개편 방향과 영향 분석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향인 재산기준 변경에 따른 수급가구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기초분석 결과를 보면, 제12차 조사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규모는 4.8%에서 제14차에는 4.7%까지 변화없이 유지되었으며, 생계급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점유했다. 제14차 조사 기준 비수급가구 월평균 소득은 422.8만원, 중위소득은 350만원이었지만, 수급가구는 122만원과 80만원으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수급액은 43.6만원과 40만원이었다. 재산기준 변화 시뮬레이션을 보면, 급지와 기본재산액 조정 시 4급지로 조정 시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생계급여 기준)는 3.8%로 11.7%가 증가하였다. 기본재산액을 2배로 인상하면 5.5%까지 늘었다. 4급지와 기본재산액을 동시 조정 시 수급가구가 6.4%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일반·금융재산에 월 1.04% 환산율 적용 시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는 5.8%로 증가하였으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 시 수급 규모는 7.2%로 추정되었다. 신규 수급가구는 부동산 등 재산 수준이 높은 수도권외의 경우 급지와 기본재산액 조정이 유리하였으며, 환산율 조정은 저소득층과 비수도권 가구에 좀 더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재산기준 변화에 따른 예산 추정은 급지 및 기본재산액 조정 시 4급지 전환과 기본재산액을 2배로 조정된 경우의 생계급여가 11조원으로, 현재보다 5조원 이상 증액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 조정은 급지 및 기본재산액 조정에 비해서는 작았으며, 일반 및 금융재산 환산율을 현재의 거주용 주택 환산율로 조정했을 경우가 가장 큰 4조원 가까이 증가하였다.

»III-2

노인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형평성 효과 분석: 피부양자 인정 요건 강화를 중심으로

설귀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전문연구원

임병인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건강보험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소득 중심의 통합을 도모한다는 목적하에 2018년 7월부터 1단계 부과체계를 시행했고, 5년이 지난 2022년 7월부터 2단계 부과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패널 제10차(2017)~제14차(2021) 자료를 이용하여 1단계 개편안의 노인가구 간 형평성 개선 효과를 실증하고, 2단계 개편안의 형평성 개선 효과를 시뮬레이션한다. 특히 피부양자 인정 요건 강화에 따른 피부양자 상태 지속 목적의 소득조정 양상을 반영하여 형평성 개선 효과를 평가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중차이 분석 결과, 개편안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입자는 적극적으로 소득을 감소시키며, 특히 기타소득을 크게 조정한다. 둘째, Kakwani 지수로 평가한 1단계 개편안은 노인가구 간 형평성을 개선하였고, 이 개선효과는 피부양자의 소득조정을 통한 피부양자 자격 유지로 인하여 구축되었다. 셋째, 2단계 개편안의 노인가구 간 형평성 개선 여부는 2021년 기준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에 달려 있다.

»III-3

코로나19 위기와 부채위험가계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종선 광주복지연구원 연구원

본 논문은 과도한 부채로 인해 위험에 처한 가계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2016~2020년 기간에 대해 부채와 원리금상환액이 자산, 소득에 비해 과도한 가계를 대상으로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떠한가, 어떤 가구가 부채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가, 특히 2020년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상황은 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등이 연구 문제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채가구와 부채위험가계 비중이 2020년에 소폭 증가했는데, 특히 DTI 기준의 부채위험가계는 눈에 띄 정도로 증가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이후 DTA, DTI 지표에서 부채위험이 있는 가구가 그 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이전 시기에 비해 높아졌다. 둘째, 코로나19 더미변수만을 넣은 모형에서는 부채위험 가처분소득이 작을수록, 금융자산이 작을수록 부채위험가구가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거주주택 시가와 거주 외 실물자산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주택담보대출, 돌려줄 전세금·보증금이 있는 경우 부채위험가구가 될 확률이 높았다. 코로나19 더미변수는 음(-)의 부호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셋째, 코로나19 더미변수와 가구주 연령, 로그가처분소득, 로그금융자산 변수와의 각각의 상호작용항을 추가 투입했을 때 가처분소득과의 상호작용항만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그 계수값의 부호가 양(+)이었다.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는 가처분소득이 작을수록 부채위험가구가 될 확률이 높았지만, 코로나19 위기 시기에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IV-1

삶의 질·사회의 질 인식의 세대 간, 계층 간 차이: 재정패널을 이용한 종단적 추이 연구

박정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호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이 연구는 우리 사회 '사회의 질' 인식 수준의 변화 추이와 이에 영향을 주는 '삶의 질' 객관적 조건의 상호연관성을 살펴보고, 이에 있어서 연령·기간·코호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재정패널 제9~14차 데이터(2015~2020)를 사용하였으며, 표본은 총 5만 4,269사례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APC 분석(age-period-cohor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의 질' 인식에 있어서, 연령·기간·코호트 효과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령·기간·코호트 효과는 '삶의 질'의 객관적인 조건에 따라서 달라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 사회 '사회의 질' 인식 수준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시간에 따른 변화뿐만 아니라 연령과 코호트 효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의 질' 인식 수준은 '삶의 질'의 객관적 조건에 따라서 동일 연령대 혹은 동일 코호트 내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IV-2

납세자 특성별 납세적정성 인식 연구

신영호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본 연구는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납세자별 특성과 납세적정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다. 납세자의 실제 납부세율과 적정하다고 인식하는 세율의 차이를 통해 납세적정성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분석에 활용한 차별점이 있다. 납세자 특성으로는 인구통계학적 변수, 정치 등에 대한 인식, 세부담 형평성 및 추가 조세부담 인식 등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통계적 변수의 경우 기혼이거나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적정 소득세율 대비 현재의 세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가일수록 현재 세율이 높다고 인식하였다. 상용직이거나 전일제일수록, 연간소득이 많을수록 적정 소득세율보다 현재 세율이 높다는 인식이 나타났다. 납세자 인식 관련 분석 결과,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낮을수록, 투표 참여 정도가 낮을수록 적정 소득세율 대비 현재 세율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전문가집단을 신뢰할수록 최저구간에서는 적정 소득세율에 비해 현재 세율이 높고, 최고구간에서는 적정 소득세율에 비해 현재 세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담 형평성과 추가 조세부담에 대한 분석 결과, 세금납부 대비 정부혜택 정도는 정부혜택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적정 세율에 비해 현재 세율이 많다고 인식하여, 정부혜택 정도에 비례하여 적정 세부담에 대한 현재의 세부담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세부담 인식 의향이 높을수록 적정 세율 대비 현재의 세율이 낮다고 인식했다.

본 연구는 납세적정성 변수를 새로 설정하여 납세자의 구체적인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 및 해석함에 따라 증세 등 조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납세의식 및 납세순응 관련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Ⅳ-3

불평등이 사회 신뢰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백승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본 연구의 목적은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재정패널의 가구원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적(소득)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사회 신뢰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기존 연구에서 드러나 사회 신뢰의 측정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잠재계층분석(LCA)을 통한 사회 신뢰 범주를 유형화하고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사회 신뢰 범주 유형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수준이 매우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시계열적인 변화에서는 불평등 수준이 높다는 인식이 적게나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둘째, 연도별 사회 신뢰의 수준은 사회 신뢰의 대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났는데, 가족에 대한 신뢰는 증가하는 반면 아는 사람에 대한 신뢰는 꾸준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셋째, 불평등 수준과 사회 신뢰의 관계는 불평등 수준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또는 향후 불평등 수준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할수록 좁은 범주의 신뢰 집단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개인별 인식의 변화에서도 불평등 수준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인식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좁은 신뢰 집단으로 이동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불평등에 대한 인식(불평등해진다는 인식)이 사회 신뢰를 낮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단순히 사회 신뢰를 낮추는 데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계층화·정부에 대한 불신 등 다양한 영역으로의 파급력이 높은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책지표와 정책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인식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파급효과와 연결고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꾸준한 추적이 요구됨을 강조하였으며, 학술적으로 사회 신뢰 측정의 정교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V-1

난방용 연료의 소비 특성 및 탄소세 도입 시 파급효과 분석

최한영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석사과정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조교수

본 연구는 일반 등유 사용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추정하고 탄소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의 소비량, 세부담액,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수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Logit-Panel 모형을 사용하였다. Log-Log 모형을 적용하여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추산하였다. 탄소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의 변화는 미시모의실험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Opinet에서 제공하는 일반 등유 평균가격 자료와 제14차 재정패널 베타버전을 사용하여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3만 9,350 관측치의 패널자료로 구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Logit-panel 분석 결과, 기준시가와 전월세 보증금이 높아질수록 일반 등유를 사용할 확률이 낮아지며, 아파트일수록 일반 등유를 사용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자가일 경우 일반 등유를 난방용으로 사용할 확률이 올라간다. 가구주의 나이가 상승할수록 일반 등유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구주의 나이는 U-자형을 그리고 있다. 가구주가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일반 등유를 사용할 확률이 올라가고, 상용직일 경우에는 일반 등유를 사용할 확률이 떨어진다. 남성 가구주일 경우에는 일반 등유로 난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일반 등유로 난방을 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일반 등유의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추정하는 Log-Log 모형을 실시하였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가진 -1.77과 0.12 값을 도출하였다. 추가적으로 계층별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알아보기 위해 소득 10분위별로 나누어 보았다. 그 결과, 가격탄력성 측면에서 저소득 계층에서는 비탄력적이었으며, 고소득 계층으로 갈수록 더 큰 음(-)의 값을 가지는 추세다. 소득탄력성 측면에서는 저소득 분위에서는 유의미한 양(+)의 값이 도출되었으나 고소득 분위로 갈수록 유의미한 값이 추산되지 않았다. 저소득 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한다면, 일반 등유 사용량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미시모의실험을

통한 2만원/tCO₂, 6만원/tCO₂, 10만원/tCO₂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 금액이 커질수록 전체적인 소비량이 감소하나 저소득 계층에선 큰 소비량 변화가 없고 고소득 분위로 갈수록 일반 등유를 적게 소비하거나 소비하지 않았다. 이상의 소비 양상으로 일반 등유 탄소세는 저소득 계층에 집중된 세부담을 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 등유의 탄소세 부과가 역진성을 지니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만약 일반 등유 탄소세가 도입된다면, 이러한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 등유를 사용하는 저소득 계층에 에너지바우처를 제공하여 부담을 완화해야 하는 방안을 정책입안자들이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V-2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추가적 소비 결정요인 분석

박명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

본 연구는 제14차 재정패널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2020년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급한 가구의 추가적인 소비에 대한 의사결정 요인을 분석한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수급이 추가적인 소비유발 여부 및 추가적인 소비지출액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로짓분석과 좌측절단 토빗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배우자가 존재하고,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 수준이 고졸 미만보다 높을수록 추가적인 소비유발 확률 및 소비지출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정치 및 정부정책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가구는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 추가적인 소비유발 확률 및 소비지출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V-3

조세적·비조세적 요인이 이전지출 및 증여에 미친 영향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현금이전 방식을 이용하는 부양목적 등의 타 가구 이전소득은 매우 보편적인데, 개별 현금이전의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이전금액은 지급·수령의 당사자인 개별 가구 및 가구원별 특성과 함께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주관적인 '유보가격'의 인식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유보가격과 이들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증여 및 타 가구 이전과 관련한 일반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의 특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제5~14차년도(2011~2020) 재정패널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별 현금 이전의 증여 여부에 대한 납세자들의 명확한 인식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 결과 비교적 작은 규모의 수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여부가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의사결정의 방식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완전한 과세 실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대한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존속으로 현금이전의 유형을 결정하는 납세자의 의사결정 방식이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장래의 증여세 과세제도 개편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증여에 대해 동일하게 규정한 증여재산공제액을 개별적 특성을 반영해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2014년 및 2016년의 증여재산공제 확대의 효과는 비교적 유의적인 반면 증여세의 부과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과 사실을 전제로 하는 2018년 이후의 신고세액공제 축소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해서 경제 규모의 확대를 반영해서 증여재산공제가 추가적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현실적인 과세실무를 반영해서 비교적 소규모의 수증액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비유의적으로 반응하는 신고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2022년

재정패널 활용 연구

최근 1년간 발표된 재정패널 활용 연구 목록입니다.

[학위논문]

제목	저자	비고
근로장려세제가 단독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분석	이정우	학위논문(석사): 한성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A Study of Income Mobility in Korea	손우현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1인가구의 연금소득대체율 연구	박원주	학위논문(박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소비자학과
사회적 선호와 사회경제적 지위의 관계: 공공정책 순응 행동을 중심으로	김인애	학위논문(박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행동사회경제학협동과정
가구 환경의 차이와 기혼 여성의 노동 참여 결정의 차이	유고운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Effect of Public Pension and Homeownership on Individual Pension Purchase	김소연	학위논문(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최근 1년간 재정패널을 활용한 학위논문들의 목록입니다.

[학술지논문]

제목	저자	비고
재정패널을 활용한 우리나라 조세재정정책의 누진도 분석	유혜미	<i>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i> , 33, 55~81.
다변량 t-선형모형을 이용한 조세재정 패널데이터 분석	구동현 이근백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33(1), 11~34.
소득의 유형 및 세부적 구성이 납세자의 위험회피성향 및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최창기 전병욱	세무와 회계저널, 23(4), 9~35.

제목	저자	비고
유자녀 부부와 무자녀 부부 사이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	김지형 김현철	국제경제연구, 28(1), 47~66.
금융이해력, 거주지와 개인연금 및 보장성 보험 가입의 관계	손준호 박소정	보험금융연구, 108, 3~39.
가계부채 보유와 보장보험 가입 간 관계분석	이경희 강성호	보험금융연구, 106, 39~81.
청탁금지법 시행이 경조비 지출에 미친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송호신	<i>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i> , 24, 627~638.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확대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성명재	예산정책연구, 11(), 101~133.
2020년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 현황 및 추이	정성훈 강수현 박은철	보건행정학회지, 32(1), 107~112.
주택소유 유형이 정치적 성향과 투표참여 의사에 미치는 영향-분할 잠재성장모형 활용	민인식	한국정책학회보, 31(1), 231~254.
노인세대의 소득분위별 주거자산 소유와 노후소득 충분성 연구	백혜연	<i>Financial Planning Review</i> , 15(3), 55~77.
가계부채 및 세금부담이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매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	전병욱 박나라	주택도시금융연구, 7(1), 5~27.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탄력성 요인분해 분석을 통한 재분배 기여도 분석	성명재	재정학연구, 15(2), 93~139.
가구의 경조사비 지출액이 가구주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고은비 송헌재 손혜림	응용경제, 24(1), 37~58.
1인 가구 특성이 청년 및 노년 세대에 미치는 영향분석	심종섭 박문수	대한부동산학회지, 40(1), 43~61.

* 최근 1년간 학술지에 게재된 재정패널 활용 연구들의 목록입니다.



한 국 조 세 재 정 연 구 원

발 행 일 : 2022. 11. 30.

발행기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 재정패널DB팀

주 소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반곡동)

배포문의 : panel@kipf.re.kr, 044-414-2473/2225

홈페이지 : www.kipf.re.kr/panel/